“우리 집은 괜찮나”…아파트 월패드 해킹 불안 확산

사생활 영상 유포 충격…공동망 사용에 한 집 뚫리면 연쇄 해킹 우려
전국 700여 아파트 명단 떠돌아…광주·전남지역 10여 곳도 포함
시민 문의 급증…렌즈 가리고 비밀번호 설정·인터넷망 분리 나서

“아파트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떠도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광주시 북구 각화동 94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최근 ‘월패드’ 해킹 여부를 문의하는 입주민 전화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월패드(wallpad·가정용 주택 관리용 단말기) 해킹 피해를 입은 국내 700여 아파트 명단에 이름이 올라온 뒤부터다.

A씨는 “월패드 제조사에 문의해 해킹된 정황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얘기를 듣고 입주민분들께 전달했는데 불안해하는 입주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 불법으로 녹화한 영상이 유출돼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월패드는 집안 벽면에 부착된 단말기로 방문객이 호출을 하거나, 집안 냉·난방 환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다.

방문객이 호출하거나 다른 세대와 통화를 할 경우 월패드에 달린 카메라로 내부가 비춰지게 된다. 해커가 이 내부 카메라를 해킹, 입주민들의 사생활 촬영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정부도 경찰과 공조, 공식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킹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 아파트 700여 곳의 명단이 떠돌고 있다. 특히 해커들이 해킹했다는 700여개 아파트에 광주·전남 아파트도 10여 곳이 포함된 리스트가 떠돌고 있는데다, 과학기술부에 도 광주·전남 아파트의 해킹 피해 관련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입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당장,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사실 여부를 묻는 입주민들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여기에 한 외국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내부가 촬영된 동영상까지 올라오면서 주민들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형편이다.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에 사는 B(40)씨는 “내가 사는 아파트가 해킹 명단에 올라와 깜짝 놀랐다”면서 “부랴부랴 월패드 카메라를 가리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는데, 가족들 일상사가 유출된 건 아닐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일단, 리스트에 포함된 광주 10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해킹되지 않았다는 제조사 답변을 받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도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 등을 안내하는 한편, 해킹된 정황이 드러난 공동주택 명단을 입수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월패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카메라 렌즈를 가려둘 것과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과기부는 또 국내 공동주택 월패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가구별 인터넷망 분리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월패드 카메라를 스티커로 막아 놓은 모습.(점선 안) 국내 한 월패드 제조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 점검 서비스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려 놓았다.(아래)

동급생 폭행 영상 유포한 중학생들 수사

중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와 싸운 동영상을 찍어 SNS 대화방 등으로 유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같은 중학교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동영상이 퍼날라지고 있다는 피해 부모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측은 지난 6일 광주시 남구 모 공원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13)에게 폭행당했는데, 이들이 이날 동영상을 찍어 SNS로 또래 아이들에게 퍼날랐다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조사를 거쳐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하직원 성추행하고 조폭 선물 받고 광주·전남 경찰들 비위 행위 잇따라

철저한 자정 노력 필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조직폭력배에게 선물 받고….’

광주·전남 경찰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직업 윤리조차 망각한 경찰들의 범죄 행위는 지역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6일 전남청 내 특정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경찰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 수사관은 팀장급 직원인 A씨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해남경찰 A 경위는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최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피해를 호소하는 B씨 신고를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광주동부경찰 B 경감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여성 접객원을 알선하는 조직폭력배에게 양주 선물을 받은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B 경감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조직폭력배와 연락을 주고 받는가 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해당 폭력배 소개로 성매매 관련 업체에 투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은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정보를 흘려주는가 하면, 사건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의 김장 담그는 산타들 26일 광주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2021 세대공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에서 자생단체 회원, 금호중앙중학교 학생들이 산타모자를 쓰고 지역 돌봄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북구청 제공〉

전남 유명 도자기 제조업체 대표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징역형 선고

전남지역 유명 도자기 제조업체 대표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도자기 제조·판매업체 대표로, 두 차례에 걸쳐 동생 남편이 보유한 같은 회사 주식 1만1000여주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세무당국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집안 분쟁 등으로 빚어졌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